

공수처는 속도전... 윤석열엔 신중론

민주, 통합당에 이달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완료 압박 '독재 배격' 발언 논란 윤석열, 해임안 제출 vs 대응 불필요 분분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임안 제출 주장까지 나오는 등 비판론에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판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제 '윤석열 때리기'에서 벗어나 당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모으면서 검찰 개혁의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5일 밤 "민주당은 윤 검찰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설훈 최고

위원이 "윤 총장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며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를 적시하지 않으면서 윤 총장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 의원은 "한 검사장 사건 조사도 윤 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수록 오히려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주고

여론의 역풍도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당내에서 나온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방송에 나와 "검찰총장을 정치권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며 "윤 총장의 발언은 통합당이 화를 낼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윤 총장의 발언 전체를 인용하며 "결국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강조한 정치 세력에 대해 경고를 한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을 겨냥했다.

원내 관계자는 "윤 총장 해임안 제출은 당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윤 총장이 하루도 윤 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집중성토 분위기가 벗어났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서두르면서 실질적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통합당이 계속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한다면 공수처법 개정 논의까지 신속히 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선임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수처법 개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정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해볼 순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세종청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輿, 지지율 하락 촉각... 부동산 안정 후속조치 검토

일주일새 2.7%p ↓... "시장 상시 점검·시장 교란행위 퇴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주택공급대책 발표 후에도 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초기 진입으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도와 달리 핵심 지지층인 수도권과 30대, 여성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자 당측 해하는 분위기다.

원내 관계자는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위협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강력한 후속대책으로 선제조치를 한 만큼, 공급대책 효과로 투기 움직임이 꺾이면서 부동산 심리도 안정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특히 총선 후 양정숙·유미희 의원 논란, 성추문으로 인한 서울·부산시장 권위 등 약재가 이어졌지만, 민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절대 과반 의석을 토대로 입법 드

라이브에만 치중된 것이 문제였다는 자성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호남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에 지지도가 역전당했다고 봐야 한다"며 "의석수만 믿고 야당과 협치 없이 독주하는 태도가 국민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다"고 혀를 찼다.

허윤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 입법이 통과될 때 야당 협조가 담기지 못했다"며 "물밑에서 꾸준히 협상을 지속하지만, 불가피하게 협조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자세를 낮췄다.

민주당은 일단 지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공급대책 등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은 탓에 여론 악화가 가중된 추

면도 있다고 보고, 시장에 끊임없이 강력한 안정화 시그널을 주며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상시관리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유형의 시장교란 행위를 반드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환율 4.0%를 2.0%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이런 추가 규제 경우 공급대책 효과가 반영될 때까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합뉴스

류호정 엄호 나선 심상정 SNS에 복장 자율 응원 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6일 '국회 복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같은 당 류호정 의원을 응원하면서 '탈피'가 입고 싶어지는 '아침'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원피스 수 많은 직장인이 사랑하는 출근룩이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직장"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며 "다양한 시민의 모습을 담은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다양한 옷을 입고 입고 회의를 진행하는 유렵연합 회의 모습 사진을 공유했다.

한편 본회의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출석해 논란의 당사자가 됐던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정바지 차림으로 출근했다. 이날은 국회 본회의의 일정이 없다.

/연합뉴스

한상혁 "검언유착 보도 사전인지는 허위"

방통위원장 "통화는 보도 한시간 뒤...법적 대응 할 것"

MBC의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되기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한상혁 방통통신위원장이 강력히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6일 입장 자료에서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3월 31일 MBC 보도 직전에 권경에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통화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이 당시 통화한 휴대전화 통화기록 캡처 화면을 첨부했다.

그는 "통화 내용 또한 MBC 보도와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며 "해당 보도 이전에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허위사실을 기초로 해 MBC의 보도 내용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선일보·중앙일보 보도는 물론,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후의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의 권경에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 "방송을 관장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몇 시간 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한동훈을 내쫓을 보도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인사가 한상혁 위원장이라는 유착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김종인 "소수 의석 한계 있었다"

통합당 대표 7월 임시국회 끝난 소회

미래통합당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소수 의석을 차지한 당으로서 다수에 대한 저항이라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7월 임시국회 끝난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통합당이 야당으로서 무력하게 보일지라도 의회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이 토의를 통해 실상을 제대로 지적해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응 방

법이 없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너무나 급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한 지역구 4선 금지"가 당정강정책으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강정책 안에 의원의 임기 제한 같은 게 들어갈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안철수 "수해 추정하자"

김종인 "예산 없다면 필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론적 차원에서 호응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한 해 3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며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때도 편성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안 대표의 추경 제안과 관련한 질문에 "수해가 너무 극심해서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

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추경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예산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예산 활용이 먼저고, 예비비도 쓰고 안 될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대표의 돌발적 제안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반응이긴 하지만, 야권에서 추경 편성이 먼저 거론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미 3차례 추경이 편성된 상황에서 야권이 추경 카드를 한번 더 꺼낸 것은 4·15 총선에 대한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권에선 코로나 추경에 4인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것이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